

한국해군 기동함대 전력건설방향의 당위성: 능력, 교리, 조직정체성을 중심으로

이 상 업 *

〈목 차〉

- I. 서 론
- II. 어떤 능력을 갖출 것인가: 현존위협 vs. 잠재위협?
- III. 무엇이 최신 해군교리 발전에 부합한 전력건설인가?
- IV. 해군의 정체성: 국가위상과 국익 보호를 위한 핵심군
- V. 결 론

I. 서 론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대한민국 해군은 90년대부터 해군의 모토이자 전력건설의 방향으로 여겨 왔던 “대양해군”이라는 표현사용을 자제해 왔다. 당시 매체들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해군이 대양해군의 뜻을 접은 듯도 했다.¹⁾ 그도 그럴 것이 ‘바다로, 세계로’라는 구호 아래 대양작전능력을 지향해 오던 한

* 해군 소령, 정운함 부장, 미(美) 컬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 국제관계(국제안보정책) 석사, 미(美) 럿거스대학(Rutgers University) 정치(외교)학 박사

국해군의 한 함정이 우리 연안에서 북한의 기습공격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해군과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그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양해군”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해군이 나아갈 방향으로 다시금 언급되기 시작했다.²⁾ 뿐만 아니라, 해군의 전력건설방향도 기존의 대양해군 건설 방향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구로 대양해군의 한 요소였던 3~4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건설하는 “해상전력 증강방안”이 연구되기도 했다.³⁾

본 논문은 연안에서의 북한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해군의 전력건설 방향은 대형함정들을 주축으로 하는 대양해군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대해 필자는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고는 해군의 능력(capability), 교리(doctrine), 그리고 조직 정체성(organizational identity)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설명한다. 필자는 전력건설에 있어 연안해군과 대양해군의 구분은 불필요한 이분법(unnecessary dichotomy)이라는 입장이다.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력건설을 목표로 해야 하며, 특정 위협만을 고려하여 전력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한반도 및 국제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전력건설 방향이 바로 한국해군이 90년대부터 설계해 온 “대양해군”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국제안보의 중심이 된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을 배경으로 발전되고 있는 해군교리를 고려할 때도, 기동함대를 주축으로 하는 대양해군능력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되었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지난 20여 년 간 한국해군에게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핵심군으로서의 대양해군은 해군의 ‘능력’을 나타냈던 표현이기도 했지만, 더욱 근본적인 특성인 ‘조직의 정체성’으로 자리잡아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에게도 대양해군의 이미지는 세계화되어가는 한국의 국가정체성과도 결부되어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해군전력의 발전 필요성을 역설하여 왔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는 해상무역의 증가에 따른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자원 등을 고려한 바다의 경제적 가치, 상존하는 해양영토분쟁의 위협, 냉전이후

1) 오이석, 「대양해군의 꿈 잠시 접는다」, 『서울신문』 2010년 9월 16일자. 박병진, 「해군 ‘대양해군’ 깃발 내린다」, 『세계일보』 2010년 9월 16일자. 유성운, 「대양해군’ 구호 그만!」, 『동아일보』 2010년 9월 16일.

2) 전현석, 「천안함 이후 사라졌던 ‘대양해군’ 구호 재사용」, 『조선일보』 2012년 2월 17일자.

3) 국회사무처, 2012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p. 79.

주변국 해군력 증강에 따른 대비책 등이 있었다.⁴⁾ 본 논문이 기여하는 점으로서, 필자는 이와 같은 과거 논문들의 논리에 더하여 최신 해군교리발전 양상을 고려하였고, 조직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과 같은 구성주의적(constructivist) 요소를 가미하여 해군전력 증강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추가적으로, 해군이 아닌 타군 및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군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였고, 해군작전 개념에 대한 논의도 최대한 쉽게 풀어쓰기 위해 노력하였다.

II. 어떤 능력을 갖출 것인가: 현존위협 vs. 잠재위협?

본 장에서 필자는 북한위협 등의 현존위협과 주변국 등을 포함한 불특정 위협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안보상황 인식임을 지적한다. 첫째, 북한 위협의 성격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둘째, 80~90년대 잠재위협이라 평가되었던 해양영토분쟁 등의 문제가 이제는 현존위협이 되어 버렸다. 셋째,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대두로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된다. 필자는 한국해군의 전력건설이 이러한 다양한 위협 상황들을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90년대부터 추진해 오던 대양해군 건설 준비 과정들은 이러한 전력건설 필요성에 부합한 방향이었음을 주장한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후, 대양해군의 기치아래 전력건설을 추진해 오던 해군의 사기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마도 ‘대양만 바라보다 안방에서 당했다’는 외부 시각이었을 것이다.⁵⁾ 이러한 시각은 해군전력을 건설하는 데 있어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해안방어에 중점을 두는 연안해군과 영해 밖에서의 다양한 임무를 강조한 대양해군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내포한다. 이러한 불필요한 이분법(unnecessary dichotomy)은 국가안보사안의 논의에 있어 비효율성을

4) 이러한 논문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노경수, 「21세기 한국의 안보와 해군의 역할」, 『제4회 함상토론회』 (계룡: 해군본부, 1995). pp. 231-273. 정호섭, 「한국해군과 대양해군을 둘러싼 제 논쟁의 분석과 새로운 해석」, 『해양연구논총』(17)호 (1996). 정호섭, 「한국의 해양안보: 그 몇가지 근원적 난제」, 『Strategy 21』 제(1)호 (1998). pp. 7-35. 이춘근, 「한국 해군력 증강의 논리」, 『Strategy 21』 제(1)호 (1998). pp. 59-84.

5) 박민혁, 김승련, 「대양해군'외치다 안방에서 북잠수함 위협 직면」, 『동아일보』 2010년 4월 21일자.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군 전력구조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군 전력건설은 당면한 안보상황에서 예상되는 어떠한 외부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연안해군과 대양해군 간의 양자택일이 의미 없는 논의일까?

첫째, 북한 위협 양상의 변화이다. 과거 1970년대와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해군의 가장 보편적인 위협은 빠른 속력으로 이동하는 간첩선이나 유도탄정, 어뢰정과 같은 강한 화력과 기동성을 갖춘 소형 함정들이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북한은 구(舊)소련으로부터 인도된 다수의 오사급(OSA I)과 코마급(Komar) 유도탄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1970년대 한국해군의 주력 전투함은 미(美)해군에서 퇴역 후 양도된 구축함(DD) 3척, 구축함 호위함(DE) 1척 등을 포함한 낡은 함정들이 고작이었다.⁶⁾ 이러한 낡은 중·대형 함정들은 전시 북한의 어뢰정과 유도탄정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1967년 발생한 6일 전쟁(the Six Day War)에서 이스라엘의 1,710톤급 구축함인 에일랫(Eilat)이 이집트의 코마급 유도탄정으로부터 발사된 3발의 유도탄 공격으로 격침당한 사례가 있다.⁷⁾ 당시 한국 영해를 빈번히 침투했다가 도주하는 빠른 간첩선들도 이러한 구형 함정으로 추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⁸⁾ 이러한 북한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의 주도로 “학생호,” “백구” 등의 중소형 고속정을 만들기 시작했다.⁹⁾ 이렇듯 당시 해군작전의 초점은 북한의 소형함정과 연안방어였고, 이에 따라 소형함정을 선호하게 되었다. 단적인 예로, 1979년, 울산급 호위함 사업이 진행 중일 무렵, 김종곤 해군참모총장은 정부에 울산급보다 작은 소형함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¹⁰⁾ 우리나라와 같이 해안선이 긴 지형조건을 가진 국가는 소수의 대형함정보다는 다수의 소형함정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논리였다. 이렇게 해서 1,200톤급 초계함(PCC)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의 위협양상은 비대칭적인(asymmetric) 성격이

-
- 6) John Moore ed. *Jane's Fighting Ships* (London: Jane's Publishing Company, 1980).
 7)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랫은 함대함 유도탄에 의해 격침된 최초의 주요(대형) 수상함으로 알려져 있다. Anthony Bruce and William Cogar. *An Encyclopedia of Naval History* (Chicago and London: Fitzroy Dearborn Publishers, 1998). p. 124.
 8) 예를 들어, 당시 간첩선들은 신속하게 35kts 이상으로 증속 할 수 있는 반면, 우리가 가진 가장 빠른 함정은 미국에서 받은 구축함으로 최대속력이 35kts 였다. 더욱이 당시 구축함들은 증기 추진 방식이었기 때문에 증기를 가열해서 최고속력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9) 학생호는 당시 학생들의 성금으로 건조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다. 백구는 USS Asheville 이라는 미국 함정의 모델에 기반을 둔 다용도 유도탄 초계정(PSMM)으로 총 8척을 건조 및 운용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김효철. 한국의 배 (서울: 지성사, 2006). p. 442.
 10)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제5권) (서울: 기아경제연구소, 1996). p. 441.

강해졌다. 이민룡 교수는 90년대 이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증강이 현저히 감소된 반면, 소형 잠수함이나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비대칭적인 전력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해진 점을 주목한다.¹¹⁾ 또한, 2000년도에 주한미군사령관은 미(美)국회에서 “북한 지도부는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연합전력의 전투능력에 필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의 우세함을 상쇄시키기 위한 전력인 탄도미사일, 특수부대, 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전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술했다.¹²⁾ 이를 증명하듯, 1996년 9월에는 강릉근해에서 북한 특수부대원들을 탑재하고 침투한 상어급 잠수함이 나포되었고, 1998년 6월에는 동해안에 침투했던 북한 유고급 잠수정이 어망에 걸려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개발 및 시험발사도 지속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대포동-I 미사일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노동 및 대포동-II, 2009년에는 대포동-II 미사일을 시험 발사 하였다.¹³⁾

최초 대양해군과 관련된 전력건설은 기존의 북한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변화되어가는 북한의 위협과 다른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해군의 의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는 기존의 연안작전을 위한 소형함정들은 북한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대양해군 전력인 대형함정들은 북한을 제외한 다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인식되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해군전력건설의 의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의 1991년 국회진술에 따르면, (대양해군 프로젝트의 하나였던) KDX 구축함 사업은 “북한의 고속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서 적(북한) 잠수함에 대처하기 위한 세력이며, 또한 2000년대 주변국 견제 전략에 대비한 전력으로서 추진”해 온 사업이었다.¹⁴⁾

실제로 대양해군의 기치아래 도입된 KDX-I급 이상의 구축함들은 기존의 울산급 호위함이나 초계함에 비해 월등한 대잠전(Anti-Submarine Warfare: ASW)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호위함이나 초계함의 주요임무 중의 하나도 대잠전이지만, 이러한 중소형 함정들이 대형구축함들의 대잠전 능력을 능가하기는

11)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황금알, 2004). p. 54.

12) 2000 Report to Congress: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ptember 12, 2000.

13) 노동 미사일은 1단계 액체추진 중거리(1,300km) 미사일, 대포동-I은 2단계 액체추진 중거리(1,800km) 미사일, 대포동-II는 3단계 대륙간(5,000~10,000km) 탄도 미사일로 분류된다.

14) 국회사무처, 1991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군본부), p. 20.

매우 힘들다. 대형함정들이 대잠전에서 유리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대잠탐지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들의 대잠 음향탐색은 함수소나(Hull-mounted Sonar)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KDX 사업으로 획득된 구축함들은 함수소나 이외에도 예인소나(Towed Array Sonar)나 대잠 헬기들을 탑재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대잠탐지 센서들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그러한 대형 구축함들은 대형의 고출력 함수소나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잠수함 탐지에 훨씬 유리한 면도 있다.¹⁵⁾ KDX 사업으로 획득된 신형 구축함들이 대북전력으로서 유용한 측면은 대잠능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골키퍼와 같은 근접무기체계(Close-In Weapon System)를 장착하여 북한의 소형유도탄 함정의 유도탄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세종대왕함급(KDX-III) 이지스(AEGIS) 체계를 갖춘 구축함들은 뛰어난 대공전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¹⁶⁾ 실제로 세종대왕함은 전력화 직후인 2009년 북한이 무수단리에서 발사한 대포동-2호 미사일 궤도를 성공적으로 추적하는 등 그 능력을 입증해 오고 있다.

둘째, 과거 잠재적인 소요로 인식되었던 해양영토 분쟁과 관련된 주변국 억제 전력이 이제는 현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해양영토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과 그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군 지휘부와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이미 90년대 이전부터 예견해 왔다. 사실, 해양 영토분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1984년 협의되고 1994년 효력이 발휘된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UNCLOS)’과 그에 따른 각국의 국익 보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¹⁷⁾ 그로티우스가 1609년 『Mare Liberum』이라는 논문

15) 고출력 능동소나의 성능은 다수의 연합훈련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국해군의 수상함들은 능동소나를 이용해 수 천 야드에서 잠수함을 접촉하는 반면, 고출력 함수소나를 보유한 미국 해군 함정들은 20,000 야드 이상의 거리에서부터 접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16) Aegis 프로그램은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의 방어를 위해 1960년대 미 국방성이 시작한 고급 함정 미사일 체계(Advanced Surface Missile System)에서 시작되었다. Aegis는 지휘/결심과 무장통제가 통합된 체계를 일컬으며, Aegis 순양함 또는 구축함은 미사일 방어, 대공전, 대수상전, 대잠전, 대지전, 전자전 등의 다양한 능력을 갖추었다. 이지스 능력을 갖춘 함정은 900개의 수상/대공 표적을 동시에 교전할 수 있으며, 1,000km 밖에서 발사된 적 미사일 탐지가 가능하다. 이지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Norman Friedman, *Network-Centric Warfare: How Navies Learned to Fight Smarter Through Three World Wars*,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9), pp. 98-100.

17)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을 발표하여 해양의 자유원칙을 천명한 이후 UNCLOS가 체결되기 전까지 해양은 (근거리의 연안지역을 제외하고) 국제적 ‘공통자산(common)’으로 여겨졌었다.¹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가들은 점차적으로 더 넓은 해양과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¹⁹⁾ 예를 들어, 미국은 주변 대륙붕과 거기에 포함된 모든 해양 자원들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선언했고, 미국의 뒤를 따라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되었다.²⁰⁾ 따라서, 연안국과 원양자원을 개발하려는 국가들 간에 충돌가능성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해양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해양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말타(Malta)의 UN 대사였던 아비드 파르도(Arvid Pardo)가 1967년 해양 사용에 대한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지칭하는 제안을 제출하였던 것이 UNCLOS의 기원이다.²¹⁾ 그러므로, UNCLOS의 최초 의도는 국가 간의 긴장과 경쟁관계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UNCLOS 협약의 또 다른 측면은 배타적 경제수역 (EEZ) 등 해안 국가가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해양의 범위를 정의함으로써, 해양의 ‘영토화(territorialization)’ 경향을 촉진시키고, 결국 이는 다시 강한 해군의 필요성을 대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켄 부스(Ken Booth) 박사는 냉전 종식 후, 대형 해군함정들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유용성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모든 연안국들(coastal states)의 관할해역에 대한 유지와 관리는 각 국가들의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일정 수준의 해군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²²⁾ 타국들이 자원개발을 위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확실히 설정함으로써 영토화 된 바다는 연안국가의 명확한 책임구역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롤드 키어슬리(Harold Kearsley) 박사는 오늘날의 해양영토는 역사를 통틀어 가장 민감한 국가자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²³⁾

the Law of the Sea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United Nations, Originally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Ocean, 1998.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웹페이지 참조.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historical_perspective.htm#Historical Perspective](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historical_perspective.htm#Historical%20Perspective). (검색일 2013.2.17)

18) Hugo Grotius. *Mare Liberum*.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1916).

19) 영해와 공해의 구분 개념은 17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연안국들은 대략 3마일을 영해의 최외곽선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그때 해안에서 발포할 수 있는 포의 사거리가 약 3마일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김현수, 『해양법총론』 (서울: 청목, 2010). p. 20.

20)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Historical Perspective)*.

21) Ibid.

22) Ken Booth. "The Role of Navies in Peacetime: The Influence of Future History on Sea Power," in *Naval Power in the Pacific: Toward the Year 2000*, by Hugh Smith and Anthony Bergin, (Boulder and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1993). p. 160.

23) Harold Kearsley. *Maritime Power and the Twenty-first Century* (Aldershot: Dartmouth

1995-1996년 사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강해진 것도 바로 이 무렵, 1994년 UNCLOS가 국제 레짐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법안을 일본 의회에서 비준하는 과정에서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UNCLOS 제 56조가 정의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의 '영토'로부터 200해리 구역인 만큼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 해군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안병태 해군참모총장은 해군력 증강계획을 보고하여 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던 대양해군 관련 전력건설을 약 10년 정도 앞당겨 집행하게 되었다.²⁴⁾ 하지만, 당시 국방부나 합참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자극하여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해군력 증강계획을 축소하게 하는 등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었다.²⁵⁾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안보관계를 고려하면, 위에서 언급한 해양영토 분쟁의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그 범위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물론이고, 중국도 한국의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양 영토분쟁의 가능성은 이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 해당되는 안보현안이 되었다. 더욱이 해양영토 및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11월,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에 상륙하거나 남중국해에 불법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대해 “승선 점검, 선박 검사, 추방, 정선 명령, 항로 변경 지시, 회항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연해 변방 치안관리 조례’를 통과시켜 남중국해가 중국의 관할권에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였다.²⁶⁾ 또한, 일본은 최근 독도(한-일), 센카쿠 섬(일-중), 4개의 쿠릴 섬(일-러) 등 영토문제를 전담으로 다룰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총리 직속기구로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²⁷⁾

이렇듯 중국과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주변 해역과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비단 해양자원 등 물질적인 차원의 국익 때문만은 아닐 것이

Publishing Co., 1992). p. 17.

24) 유용원, 「대양해군 10년 앞당겨... 해군 전력증강계획」, 『조선일보』 1996년 5월 23일자.

25) 이종훈, 「대양해군 전략 재검토」, 『문화일보』 1997년 3월 26일자.

26) 최유식, 「中 '남중국해는 우리 영해' 여권 이어 조례도 제정」, 『조선일보』 2012년 11월 29일자.

27) 이충원, 「일본, 독도 전담 부서 설치키로」, 『연합뉴스』 2013년 2월 5일자.

다. 해양이 영토화 된 만큼 영토에 대한 수호는 독립적인 현대국가로서 (이러한 국가정체성 인식에 바탕을 둔) 주권(sovcreignty) 문제로 인식되어 온 이유도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두드러진 현상인 해양진출과 해군력 증강 노력이 민족주의(nationalism)로 인한 현상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²⁸⁾ 또 다른 학자들은 중국의 이러한 대외정책들을 국제관계에서 강대국(great power)의 지위(status)를 확고히 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도 한다.²⁹⁾ 일본이 해양영토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물론 민족주의의 영향이 있겠지만, 중국의 경우와는 또 다른 국내정치적 배경이 있을 지도 모른다.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특히 수 십 년간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어 왔다. 게다가 지난 수년간 이러한 국가,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6년간 총리가 7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이러한 국내 문제점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³⁰⁾ 주의 전환전쟁이론(diversionary theory of war)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강경한 자세는 다른 국가와의 영토분쟁 같은 외부문제를 강조하여 내부 결속력을 공고히 하는 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를 창출하여 국내정치 및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일 수도 있다.³¹⁾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과 이들이 자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방어선의 범위가 확장되어져 왔다는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이 주변국들에 대한 억제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중국 해군은 잠수함이나 고속정 등을 위주로 한, 전통적 강점이었던 접근거부(access-denial) 능력에 더하여, 최근에는 해군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력투사능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다. 예를 들어, 90년대부터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킬로(Kilo)급 잠수함이나 소브레메니(Sovremenny)급 구축함을 비롯하여 루후급 구축함이나 장후급 호위함과 같은 신형 해군함정을 자체 건조하여 현대적인 대양작전

28) Robert S. Ross, "China's Naval Nationalism Sources, Prospects, and the U.S. Respons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2, Fall 2009, pp. 46-81.

29) Xiaou Pu and Randall Schweller, "Signaling Status: China's Rising Strategy and the Politics of Great Power Emergence," in *Status in World Politics*, by T.V. Paul, Deborah Larson and William Wohlforth (출판 예정).

30) Martin Fackler, "Ex-Premier Is Chosen to Govern Japan Again,"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6, 2012).

31) Diversionary theory of war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비판적인 시각을 위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Jack S. Levy,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A Critique" in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 pp. 259-288.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특히, 중국은 80년대 말부터 국방전략으로서 ‘다층 방어선’ 개념을 수립하였는데, 최외곽 방어선은 일본 본토, 류큐 섬, 대만, 필리핀 및 보르네오를 연결하는 지역을 포함한다.³²⁾ 이렇듯 대륙보다는 해양을 향한 안보정책과 그에 따른 전력투사능력을 강조함에 따라 2000년대부터 대공전(Anti-Air Warfare) 능력이 대폭 향상된 루조급과 루항급 대형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의 제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냉전이라는 안보환경과 미국의 독려에 힘입어 소련의 잠수함과 항공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양해군 전력들을 꾸준히 증강해 왔다. 특히, 1980년 스즈끼 총리가 1,000해리 방어 정책을 발표한 이후, 80년대 말에는 잠수함 16척, P-3C 100대, MH-53 기뢰대항헬기 12대, 4척의 이지스 구축함 등을 포함한 대규모 해군전력획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³³⁾ 1,000해리 방어정책이란 일본으로부터 1,000해리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소련의) 잠수함 및 항공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소야, 쓰가루 및 대한해협을 포함하여 필리핀 동부로부터 괌 서부에 달하는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³⁴⁾ 최근에는 헬기 항모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13,500톤) 구축함인 휴가함(DDH181) 등을 획득하여 전력투사능력을 증강시키기도 했다.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웃 강대국들이 보유한 해군전력의 수적 우세도 중요한 점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두 국가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설정한 방어선 안에 한반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이들과 물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억제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국들이 무시할 수 없는 해군력과 그로 인한 억제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우호관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초국가적 위협의 대두에 따라 국가 간의 긴밀한 공조가 국제안보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냉전체제 종료 후 가장 두드러진 국제안보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32) John Wilson Lewis and Xue Litai, *China's Strategic Power: The Politics of Force Modernization in the Nuclear Ag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229-230.

33) Euan Graham, *Japan's Sea Lane Security, 1940-2004: A Matter of Life and Death?* (New York: Routledge, 2006). pp. 122-149. 여러 전력 가운데, 이지스 구축함은 전시에 일본의 방어를 위해 증강되는 미 항공모함을 소련의 잠수함과 항공기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기 위한 전력으로 도입되었다. M. J. Green, "Despite Aegis, Japan Still Will Depend on U.S. Navy," *Defense News* (August 13, 1990).

34) Ibid. p. 133.

테러리스트나 무장단체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들의 역할 및 초국가적 위협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특히 국제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안보관계에 있어 이들이 갖는 비대칭적인(asymmetric) 특성들 때문이다.³⁵⁾ 예를 들어, 테러단체는 테러 목표국가(예: 미국)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반해, 그 국가는 이 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힘들다. 또한, 이 테러단체는 목표를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할 수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테러위협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과 재원이 매우 제한된다. 이와 같이 국제안보문제에서 비국가 행위자 역할 비중이 높아지면서,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는 또 다른 종류의 안보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또는 그 제조 기술이 테러단체들에게 한 번 확산된다면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핵무기 제조 기술을 보유한 파키스탄의 과학자(A.Q.Khan)가 북한이나 이란 등에 기술을 전파하여 국제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핵무기는 냉전기 동안 미국-소련 두 초강대국 간 상호억제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했던 수단이었다고도 평가되는 반면,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증가된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세계 각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 공조 및 협조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2년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2003년 이를 차단(interdiction)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발의하였다.³⁶⁾ 다국적 (핵)비확산 협력 방안인 PSI에는 최초 11개국이 참가하였으며, 2009년 현재, 95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범세계적 안보 협력제도도 정착하였다.³⁷⁾ 한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불참 결정을 하였다가, 비교적 최근인 2009년 참가 결정을 내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³⁸⁾ PSI 참가국

35) Robert O. Koehane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Fourth Edition)* (Glenview, IL: Longman, 2011). p. xxxi.

36) U.S. State Department, *2002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cember 2002.

37) President's Statement 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June 23, 2006. 원문 자료를 위해서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6/06/20060623.html>. 최초 참가 11개국은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이다. Bureau of Public Affairs, "ROK Endorses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rinciples," Washington, D.C., May 26, 2009. 원문 자료를 위해서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state.gov/r/pa/prs/ps/2009/05/123842.htm>.

38) 제 41차 SCM 공동성명 (2009년 10월 22일).

들은 관심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로부터 대량학살무기 및 발사체계, 또는 관련 물질의 이동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차단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³⁹⁾ 많은 경우 공해에서 의심되는 선박을 강제로 정선하고, 승선 및 검색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의심 선박이 검색을 거부하거나 공격적인 태세를 취할 경우, 대양에서 신속한 기동을 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 무장된 (특수)요원들을 공중에서 침투시킬 수 있는 헬기 등 다양한 무장 및 장비를 탑재해야 하고, 다른 국가의 해군 함정들과 협조하여 연합 작전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대형 해군함정이다.

또 다른 국제공조가 필요한 안보 사안의 예는 해적문제이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전반기까지 인도네시아 근해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의 활동이 증가하여 세계 각국 상선의 통항을 위협하였다.⁴⁰⁾ 국제사회의 공조로 2007-2008년경 이곳에서의 해적활동은 감소하였지만, 대신 내전을 겪고 있던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근해에서의 해적활동이 또 다른 국제무역의 위협요인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소말리아의 대통령과 UN 안보리는 국제사회에 소말리아 근해 안전보장을 위한 치안활동을 요청하였고, 특히, 해적에게 피랍된 한 선박이 무기(및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임이 의심되자 미국, 러시아, 프랑스, 유럽연합(EU), 나토(NATO) 등 국제 해군 전력들의 공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⁴¹⁾ 이후 세계 각국의 해군들은 연합기동부대(CTF-150)를 구성하여 해적 소탕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 2009년부터 충무공이순신함급 구축함(DDH-II) 1척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21일, 소말리아 근해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와 21명의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등 해적소탕을 위한 국제적인 안보협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⁴²⁾ 이는 한국의 국제적 경제활동을 보호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했다는 것도 있지만, 국제수역에서 자국의 국민을 보호했다는 차원에서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지킨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만일 한국해군이 대양작전을 위한 해군력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해적들이 원하는 몸값 협상에 타협하거나 다른 나라의 힘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계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바다를 통한 물동량이 날로 증가

39) State Department,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agreed at Paris, September 4, 2003.

40) Noah Berlatsky, *Piracy on the High Seas* (New York: Greenhaven Press, 2010). p. 9.

41) Nitin Pai, "The Indian Navy Should Engage Pirates Who Threaten Indian Nationals," in Noah Berlatsky, *Piracy on the High Seas* (New York: Greenhaven Press, 2010). p. 55-56.

42) BBC News, "South Korea rescues Samho Jewelry crew from pirates," January 21, 2011.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국제 안보협력에 동참하여 자국민을 보호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이제 자유무역경제체제와 국제사회 동참을 결정한 한국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그 수단인 대양작전을 위한 해군력도 그럴 것이다.

Ⅲ. 무엇이 최신 해군교리 발전에 부합한 전력건설인가?

2010년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군은 전력증강 방향을 대형화/첨단화가 아닌 “북한의 위협을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놓고” 북한이 보유한 것과 유사한 소형 재래식 무기 위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었다.⁴³⁾ 유사한 맥락으로 당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500톤급의 소형 잠수함 건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⁴⁴⁾ 하지만, 구식 무기체계를 보유한 적과 싸우는 최선의 방법이 반드시 똑같이 구식무기로 싸우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무기로 무장된 테러단체와의 전투에도 최신의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그 이유는 최소한의 부수적인 피해로 정치적인 목적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 필자는 기동함대를 주축으로 하는 대양작전능력은 최근 발전되어 온 교리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한 전력건설 방향임을 주장한다. 특히, 효과 달성을 위한 합동적, 공세적 전력 운용 차원에서 대양해군 전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주장한다.

현대전을 위한 교리의 내용을 고려하면, 해군이 90년대 초반부터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던 대양해군전력 건설계획은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군 교리발전 추세에서 가장 주목할 점 중의 하나는 ‘군사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인식에 대한 변화이다.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효과중심작전(Effects-Based Operations: EBO)이나 신속결정작전(Rapid Decisive Operations: RDO)과 같은 개념이다. 전통적인 재래식 전쟁 개념에서는 최우선 목표를 공격하기에 앞서 적의 방어 전력을 먼저 무너뜨려야 했다. 하지만, RDO 개념에서는 그러한 소모적인 ‘순차적 전

43) 박성진, 「전력강화 ‘거꾸로 가는 군’ 첨단화보다 ‘재래식 무장’쪽으로 방향 전환 검토」, 『경향신문』, 2010년 4월 28일자.

44) 국회사무처, 2010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국방부, 합동참모부), p. 42.

쟁' 방식을 지양한다. RDO가 추구하는 전쟁수행 방식은 '평행적 전쟁(parallel warfare)'으로 이는 적이 권력유지나 전쟁지속을 위해 의존하는 결정적인 시스템들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⁵⁾ 여기서 결정적인 시스템들의 예로는 지도부, 전력공급원, 통신시설, 필수 산업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평행적 전쟁의 목표는 적을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군사력)을 경제적으로 사용하여 긍정적인 정치적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효과의 성취인 것이다.

물론, 군사전략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군사력의 사용 방식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영국의 전략가 리델 하트는 전쟁에서의 '간접적 접근'을 주장함으로써 '효과' 측면을 강조했다.⁴⁶⁾ 그는 확고한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는 적을 정면 공격하기보다는 적의 방어태세를 느슨하게 하거나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군사력 사용에 대한 원칙은 고대 중국의 전략가인 손자의 병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손자는 전쟁을 수행함에 최상책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최하책은 성으로 방어된 도시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⁷⁾

효과중심작전(EBO)에서 견지하는 군사력 사용 방식이 신개념은 아니었지만, 주목할 것은 현대전에 정밀유도미사일(Precision-Guided Missiles: PGMs)이 등장함으로써 그러한 신속하고, 결정적이고, 경제적인 전쟁 수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고, 대양작전능력을 갖춘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해군전력이 그러한 무기체계를 탑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작전요소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EBO 전쟁 개념이 체계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전쟁은 1991년 걸프 전쟁이었다. 뎀틀라(Deptula) 미공군 장군에 의하면, 걸프 전쟁 첫 날 하루 동안 공격한 표적의 수가 1942-1943년간 미 8공군이 베트남전에서 공격한 총 표적의 수보다 많았다고 한다.⁴⁸⁾ 이때 표적 공격은 잠수함과 수상함에서 발사한 토마호크 대지공격 미사일(TLAM), 항공모함 함재기, 특수부대, F-117 스텔스 폭격기 등 다양한 해군 및 공군 작전 요소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사한 작전개념이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시작국면에도 적용되었다. 사담 후세인에 대한 기습 공격은 잠수함과 수상함 등의 해군작전요소에서 발사한 39발의 토마호크 대지공격 미사일로 시작되었다.⁴⁹⁾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45) Brigadier General David A. Deptula, *Effects-Based Operations: Change in the Nature of Warfare* (Arlington, Virginia: Aerospace Education Foundation, 2001), pp. 3-4.

46) B.H. Liddell Hart, *Strategy* (London: Faber & Faber Ltd., 1954).

47) Sun-Tzu, *The Art of Warfare*,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y Roger T. Ames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3), p. 111.

48) Deptula, *Effects-Based Operations*, p. 2.

및 재건 국면을 제외한다면, 1991년과 2003년 두 전쟁 모두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한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만일, 미군이 핵심표적들을 해군과 공군 작전요소들을 이용하여 무력화시키지 않고 이라크의 지상군과 정면 대결로 시작했다면, 이 전쟁들은 더 길게 연장되었을 수도 있다.

효과중심작전에 기본적으로 동반하는 전쟁수행 개념은 바로 ‘합동성’이다. 합동성 개념도 90년대부터 미군 교리에서 강조된 개념 중에 하나이다. 1996년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표한 『Joint Vision 2010』은 미군이 비용과 중복된 기능을 줄이면서 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하려면 다른 능력들을 통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쓰고 있다.⁵⁰⁾ 또한, 미래전장에서 지휘관들은 “즉각적 효과를 창출하고 기대 효과를 성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력들이 어떤 전력들인지 고안해 내고, 그러한 전력의 조합을 만들어 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⁵¹⁾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동성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다른 병종을 통합하여 통합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임무를 위해 2개 이상의 다른 병종이 지닌 능력을 함께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는 것이다.⁵²⁾ 다시 말해, 미 공군의 텡툴라(Deptula) 장군이 강조하듯, 합동성은 모든 전투상황에서 각 병종을 똑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임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전력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⁵³⁾ 그러므로, 합동성은 육군, 해군 및 해병대 그리고 공군 등의 다른 병종들이 서로 다른 강점을 최대한 특화하여 유지할 때 의미가 있고, 그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합동성의 개념은 최근에 개발되는 미군 교리에 전반적으로 녹아있을 만큼 현재와 미래의 안보위협에 대비한 필수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0년 미국방성에서 발표한 『합동작전활동 개념(Capstone Concept for Joint Operations Activity Concepts』도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합동작전활동 개념에 의하면, 미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합동 전력은 “우세한 전력을 선별적으로 주요 목표에 집중시키기 위해, 일정 분야의 또는 분야 상호 간의 기동능력, 화력, 및 정보를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⁵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합동

49) Michael R. Gordon and General Bernard E. Trainor, *Cobra II: The Inside Story of the Invasion and Occupation of Iraq*. (New York: Pantheon Books, 2006). p. 175.

50)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10*. (Washington, D.C., 1996). pp. 8-9.

51) Ibid. p. 9.

52) 합동 작전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Joint Chiefs of Staff, *Joint Publication 3-0 Joint Operations*. (Washington, D.C., 2011).

53) Deptula, *Effects-Based Operations*. p. 23.

으로 인한 승수효과(joint synergy)로서 이는 각기 다른 병종의 능력을 조합하여 효과를 증대하고 다른 병종의 취약점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동 작전활동 개념의 하위 교리 중 하나인 『합동 작전적 접근 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은 그러한 상호 상승효과(cross-domain synergy)가 전장에서 합동전력 고유의 비대칭적인 이점을 창출 및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한다.⁵⁵⁾ 예를 들어, 아군 공군 전력이 적의 대함 무기체계를 공격 할 수도 있고, 해군 전력이 적 대공방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으며, 지상군 전력이 아군 공군 또는 해군전력을 위협하는 지상에 기반을 둔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⁵⁶⁾

이러한 미군의 교리 발전이 한국의 전력건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대북 역제의 핵심인 만큼, 미국의 군사 교리 변화는 한-미 연합전력 운용 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EBO 및 합동성 등이 강조될 때, 이러한 교리 변화는 한-미 연합사 전쟁 계획에도 반영되었다. 1998년 이전의 계획은 북한의 공격이 일단 시작되면 이를 저지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다시 밀고 올라가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했다.⁵⁷⁾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한국은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미군 증원전력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전선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1998년 개정된 작전계획은 공세적인 작전개념을 반영하여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북한의 장사정포 등 사전에 선정된 표적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제 타격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⁵⁸⁾ 이러한 전쟁개념에서 역시 선제공격은 잠수함, 수상함, 항공모함, 공군전투기 등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작전요소들이 담당하게 된다. 한국 해군에서 기동함대전력과 같은 대양작전 능력을 보유해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작고 효율적인 무기체계도 물론 그들만의 가치가 있겠지만, 현재 발전되고 있는 미래전장에서의 전쟁 개념과 전쟁 계획을 지원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장기 작전능력과 전력투사능력을 갖춘 대형함정들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1,800톤 손원일급잠수함도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2020년경 전력화될 3,000톤급 중잠수함과 비교할 때, 무장 적재량 등을

54) Department of Defense, *Capstone Concept for Joint Operations Activity Concepts* (Version 1.0), 8 November 2010, p. JCC-10.

55) Department of Defens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 (version 1.0.), 17 January 2012, p. 16.

56) Ibid.

57)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oplan-5027.htm>.

58) Ibid.

포함하여 작전능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특히,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한국으로서 이러한 정밀타격능력과 대양작전능력을 갖춘 해군전력은 분명히 미래전장에서 효과와 합동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IV. 해군의 정체성: 국가위상과 국익 보호를 위한 핵심군

필자가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한국해군의 기동함대건설의 당위성은 바로 한국해군이 90년대부터 지향해 온 대양해군은 단순히 “능력”적인 면보다는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국익을 보호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양작전능력을 갖춘 해군은 대한민국 해군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를 정의하는 조직 정체성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자리 잡았으며 그러한 조직 정체성은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질 것이다. 또한, 대양해군이라는 한국 해군의 이미지는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세계화되어 가는 한국의 국가정체성과도 결부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 본 장에서 필자는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이론 중에서 구성주의적(constructivist) 입장을 취한다.⁵⁹⁾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움직임은 단순히 한국해군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넘어서 한국 해군이 (국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 군인가라는 조직의 정체성을 정의해가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해군의 역할은 북한의 침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주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서만 정의되었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한국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군 전체 노력의 일부였

59) 구성주의 시각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꼭 개인의 이익 뿐 만이 아니고, 제도(institutions), 정체성(identity), 또는 기준(norms) 등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구성주의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행동이나 물건들이 개인들에게 갖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socially constructed meaning)’를 강조한다. 세부적인 구성주의 시각의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eter J. Katzenste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다. 노경수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한국해군의 위상은 북한 간첩선을 추격하는 데만 적합하고 육군을 보조하는 역할의 “고속정 해군”이었다.⁶⁰⁾

당시 해군의 역할이 그렇게 제한된 체로 유지되었던 것은 어느 정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정의된 한국군과 미군간의 역할 분담 때문이기도 했다. 1953년 방위조약체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하였고 오히려 북한을 점령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이 독단적인 군사행동으로 휴전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의 공식 방위조약 체결을 강력히 원했었다. 이에, 아이젠하워 정부는 방위조약을 한국이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으로 이용하였다.⁶¹⁾ 먼저,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美)육군 장성인 유엔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정전시 및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는다. 두 번째로, 방위조약의 세부조항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국군 구조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해군과 공군 전력은 최소로 유지하고, 정상적인 육군 전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⁶²⁾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해군과 공군 전력을 지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해군이나 공군과 같은 값비싼 전력건설을 위해 많은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군 구조와 능력 뿐 아니라 각 군이 갖는 자군의 이미지와 정체성에도 지속적인 제한요소로 작용하였다.

냉전이 끝나갈 무렵, 국제관계와 국내정치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 또는 정체성에 영향을 줄만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냉전 이후 더욱 두드러진 세계화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⁶³⁾ 국제관계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한국은 좀 더 경쟁력 있고 정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활발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88년 국제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였고, 이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21세기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여겨졌다.⁶⁴⁾ 1991년에는 국제연합(UN)의 정식

60) 노경수, 「21세기 한국의 안보와 해군의 역할」, 『제 4회 함상토론회』 (계룡: 해군본부, 1995), pp. 231-273.

61) Jeremy Pressman, *Warring Friends: Alliance Restraint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62) 서진태, 「참여 정부의 국방개혁 선결과제」, 정인문, 김기정, 이성훈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 개혁』 (서울: 오름, 2004), pp. 265-266.

63) Joseph S. Nye, “Transnational Relations, Interdependence, and Globalization,” in *Millennial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Studies*, by Michael Brecher and Frank P. Harve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p. 167.

64) 국제관계에서의 국가 위상(status)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국제 스포츠 경기 등의 주최는 주최국의 국제적 위상을 나타내는 위상 표식(status marker)이라고도 주장한다. Deborah Larson, T.V.

회원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북방정책(Nordpolitik)’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냉전기간 동안 공산권에 속해 있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예컨대, 1990년 한국과 수교관계에 있는 국가의 수는 140개였는데 반해, 1999년에는 그 수가 183개국으로 증가하였다.⁶⁵⁾ 특히, 냉전 기간 중 북한의 후원국이었던 러시아(1990년), 중국(1992년)과의 수교는 당시 한국에게 가장 큰 외교적 성과였으며, 북한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었다. 국내정치 측면에서도 큰 변화들이 있었다. 1993년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 된 이후 약 30년 만에 문민정부가 탄생 하였고, 이는 한국의 민주화에 큰 진전으로 여겨졌다. 국방정책에 있어서도 ‘주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던 작전통제권 이양 작업을 추진하여 1994년에는 한국군에 대한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이양되었다.

당시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김영삼 정부가 1995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세계화” 정책이었다. 당시 세계화 정책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선진국들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린다는 국가 차원의 결의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사무엘 김(Samuel S. Kim) 교수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을 남-북한 경쟁에서 탈피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중심을 향하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인식하고 표출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평가한다.⁶⁷⁾ 물론, 세계화 정책으로 한국의 능력과 국제화 정도가 실제로 증대되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사회에서 떠오르는 테마는 당당한 주권국으로서 한국의 “세계로!”였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에서, 한국해군은 북한 위협으로부터 방어는 물론, 좀 더 폭넓은 국익을 위해 일하는 군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⁶⁸⁾ 해군은

Paul, and William Wohlforth, “Status and World Order,” In *Status in World Politics*, by T.V. Paul, Deborah Larson and William Wohlforth (발간 예정).

65)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1990, 외교백서 2000.

66) Samuel S. Kim, *Korea's Globaliz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 3.

67) Ibid.

68) 여기서 필자가 사용하는 (조직의) “정체성”은 역할 정체성(role identities)과 종종 연관되는 “구성적 기준(constitutive norms)”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정체성과 관련되는 기준(norms)은 “행위의 목적을 상술”하기 보다는 “집단적 기대와 개인적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정의”하는 것을 돕는다. 정체성의 개념에 대한 좀더 상세한 논의는 다음 문헌 참조. Rawi Abdelal, Yoshiko M. Herrera,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se McDermott, “Identity as a Variable,” In *Measuring Identity: A Guide For Social*

또한 장차 국익 증진과 국가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군이 될 것을 강조했다. 필자는 여기서 북한 위협과 관련된 해군의 전통적 임무가 한국의 국익보호에 관련되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군사위협관련 임무는 단연 가장 중요한 한국의 안보 문제이며, 따라서, 국익에 관련된 사안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새롭게 강조되는 해군의 정체성은 북한위협과 관련된 임무 뿐 아니라 공해에서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외국과 군사협력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익과 위상을 보호 및 대표하는 임무도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해 밖에서의 국제 작전도 한국해군의 “에센스(essence)”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1991년부터 쓰기 시작했던 “바다로, 세계로”라는 해군의 표어는 그러한 해군의 새로운 정체성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사실, 전통적인 임무와 새로운 정체성과 관련된 임무 모두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익 증진에 관련된다. 당시 변화하고 있던 것은 해군이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헬퍼린(Halperin)은 조직의 에센스(essence)를 “(조직이) 어떤 임무를 해야 하고,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직 내 지배적인 집단의 시각”이라고 정의한다.⁶⁹⁾ “에센스”가 조직에서 왜 중요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나마 조직의 행동 특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조직의 행동과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조직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최선”을 찾기 보다는 미리 수립된 표준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등을 적용함으로써 “만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⁷⁰⁾ 이러한 경향은 조직의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조직원과 그들 간에 협조가 필요하고, 또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익추구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구성원들은 많은 경우 조직 정체성과 기준(norms)에 근거하여 행동방식을 결정한다. 이 구성원들의 행동은 적절함의 논리(the logic of appropriateness)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이는 행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Scientists, by Rawi Abdelal, Yoshiko M. Herrera,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se McDermot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21.

69) Morton H. Halperin, *Bureaucra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With the Assistance of Priscilla Clapp and Arnold Kanter. p. 28.

70) “만족(satisficing)”은 최선 보다는 충분히 좋은 방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James G. March, *A Primer on Decision: How Decisions Happen* (New York: Free Press, 1994). pp. 18-23.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대표하는 단체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또는 알맞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⁷¹⁾ 또한,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의 “에센스”를 정의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표준절차나 조직의 정체성 등이 한 번 형성되면 지속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직은 대체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특성이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볼 때, 대양에서의 국익 보호와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해군의 목소리는 국가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정의하려는 해군의 움직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군의 역할 정의는 당시 한국의 새로운 정체성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당시 국가적으로 떠오른 테마는 ‘세계로’ 였다. 대북관계가 물론 한국의 최우선 안보사안이었지만, 한국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만큼 한국의 정체성은 폭넓은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인식되어 갔다. 이를 배경으로, 국가를 위해 해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해군의 지도자들은 새롭게 정의되고 있던 해군의 필수적인 임무와 능력을 위해 필요한 도구(무기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특히, 자원으로로서, 또는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바다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던 당시, 해군을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던 한국의 국가안보, 경제활동, 및 외교정책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⁷²⁾

한국해군이 어떤 해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해군 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분기점은 1990년으로 볼 수 있다. 이때가 바로 국가 정책입안자들과 해군 지도부 사이의 논의에서 장래의 해군 상과 관련하여 “대양해군”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이다. 또한, 이때가 해군 지휘관들이 해군과 장차 한국의 번영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국정감사에서 해군 지휘관들이 해군을 소개하는 인사말을 보면, 90년 전후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1988년과 1989년 국정감사에서 해군 참모총장은 해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철저한 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국민이 군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⁷³⁾ 반면, 1990년의 참모총장은 해군이 국익과 자유로운 해상활동을 보호하고 장차 21세기 한국을 번영국가로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71) Ibid. p. 58.

72) 정호섭, 「한국해군과 대양해군을 둘러싼 제 논쟁의 분석과 새로운 해석」, 『해양연구논총』 제17호, 1996. p. 325.

73) 국회사무처, 1988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군본부), pp. 1-2. 국회사무처, 1989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군본부), pp. 1-2.

하는 대양해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⁷⁴⁾ 이처럼, 90년대 전의 중점은 북한이었으며, 90년대 이후부터는 해군의 역할이 좀 더 넓은 의미의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이 해군 정체성 형성과정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인 또 다른 이유는 한국 해군이 다국적 연합훈련인 림팩(RIMPAC)에 참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림팩은 미 3함대 주관으로 1971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 온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군 훈련이다. 최근 2012년 림팩에는 22개국의 해군과 해병대 부대 및 지휘관들이 참여했다.⁷⁵⁾ 한국 해군이 림팩에 참가하게 된 것은 1982년 해군대 해군 회의에서 미 해군 참모총장인 왓킨스 제독(Admiral James D. Watkins)의 초청으로 비롯되었다.⁷⁶⁾ 5년간의 검토 끝에 국방부는 1988년 7월 림팩훈련에 2명의 해군 장교를 참관인으로 보내고, 그 해 11월 참가결정을 내렸다.

림팩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얻는 가장 확실한 이점은 해상교통로 보호 등 대양 작전을 위한 선진 전술과 지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훈련참가로 국제적 무대에 노출됨으로써 얻는 또 다른 결과가 있다. 바로, 한국 해군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 과정을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가 주장하듯,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⁷⁷⁾ 국제적인 이벤트에 참가함으로써, 해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국가와 해군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의 대형 해군 함정들을 보며, 한국 해군의 상대적 후진성을 느끼며 자극을 받을 수 있다. 1990년 림팩에 최초 참가한 서울함과 마산함은 당시 한국형 구축함으로 불렸지만, 실상은 1,500톤 밖에 되지 않는 함정들로서 그 능력이 훈련에 참가했던 다른 선진국의 대형 전투함(4,000~9,000톤)들에 비하면 극히 제한된 대양작전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림팩훈련을 참관 또는 참가했던 우리 장교들은 한국해군의 제한된 능력과 (다국적 해군과의) 상호운용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대양작전능력을 가진 함정 건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⁷⁸⁾ 또 다른 한편, 이러한 국제적 이벤트에 참가함으로써, 해군장병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부임을 느끼고,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한

74) 국회사무처, 1990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군본부), pp. 1-2.

75) 자세한 정보는 다음 미 태평양 사령부 웹사이트 참조. <http://www.cpf.navy.mil/rimpac/2012/forces>.

76) 박광주, 「대양해군 성장 밑거름/해군, 환태평양 훈련 참가 의미」, 『세계일보』 1990년 3월 25일자.

77)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2, Jun. 1994: pp. 384-396.

78) 국회사무처, 1989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군본부), p. 20. 국회사무처, 1995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군본부), p. 18.

국을 대표하는 일원으로 생각하게 된다. 해군 장병들은 국제적 해군문화에 노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외국 해군들과의 교류를 통해 최신 해군전술, 무기체계 및 친선활동 등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군의 공통된 관례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규모 연합훈련에 참가함으로써, 한편으론 자신들의 현재 모습에 자극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해군 사회의 일원으로 고무되기도 하는 과정에서 한국해군의 정체성과 대양작전을 위한 전력건설의 방향이 형성되어 갔다.

90년 림팩 참가 이후에도, 92년 사관생도 최초 세계일주 순항훈련(충남함, 마산함), 93년 해군함정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 최초 방문(전남함, 울산함) 등 의미 있는 우리 해군의 국제경험이 지속되었다. 특히, 93년 9월 러시아 방문은 그해 8월 러시아 함정들의 부산항 방문에 대한 답방이었으며, 이러한 교환방문은 1990년에 있었던 한-러 수교를 기념하는 의미로 이루어졌다. 특히, 러시아를 방문하는 함정에는 한국해군의 초청으로 학자와 기자단이 편승하였는데, 이는 학자와 기자들이 러시아 해군과 같이 한국해군보다 발전된 해군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한국해군 발전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표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⁷⁹⁾ 또, 이때가 바로 몇몇 국회의원들이 대양해군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⁸⁰⁾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경험들이 갖는 더욱 중요한 의미는 세계를 일주하고, 외국 항구를 방문하면서, 한국해군이 대양해군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하면서 강조했던 해군의 역할을 실제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한국 함정들이 군사외교를 통해 한국의 외교정책에 기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방문한 함정은 1,500톤급 소형 전투함들이었지만, 1990년대 초반의 이러한 경험들은 해군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그러한 임무를 위해 어떤 함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

1990~1994년 기간부터 이러한 해군의 정체성과 전력건설 방향은 더욱더 명확해 졌다. “대양해군”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공식 연설에서 등장했다. 김철우 참모총장은 1991년 취임식 연설에서 한국해군은 대북관련 임무에 더해,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해양활동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대양해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⁸¹⁾ 그 이후로, 각종 행사나 회의에서 “대양해군”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⁸²⁾ 다음

79) 하준우, 「우리군함 처음으로 러시아 가다」, 『동아일보』 1993년 9월 20일자.

80) 국회사무처, 1993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군본부).

81) 「해참총장 이취임식」, 『서울신문』 1991년 9월 6일자.

82) 「해사생 순항훈련 첫 세계일주」, 『동아일보』 1992년 9월 14일자. 국회사무처, 1992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군본부), pp. 1-2.

참모총장인 김홍렬 제독은 해군의 역할을 국가정책과 좀 더 강하게 연관지어, “시대가 요구하는 해군의 역할,”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해군,”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양해군”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⁸³⁾

특히, 1995년은 해군이 공식적으로 대양해군 기치를 올린 해로 기록된다.⁸⁴⁾ 첫째, 해군은 1995년 3월 『21세기를 향한 해군』이라는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전력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⁸⁵⁾ 둘째, 김영삼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한국해군이 대양해군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 이것이 대통령 연설에서 처음으로 ‘대양해군’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아니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초로 언급한 것은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대양해군 언급은 해군 전력건설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먼저, 95년 김영삼 대통령의 언급은 해군이 대양해군 전력건설을 추진하는데 반(半)공식적인 허가로 여겨졌다. 또한, 1995년부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대통령 연설에서 등장한 ‘대양해군’은 1998년을 제외하고 2008년까지 모든 졸업식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는 ‘대양해군’의 기치가 국가 지도자의 시각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95년 4월 안병태 참모총장은 “미래 전략적 환경을 위한 대양해군 건설 준비”를 해군 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당시까지 서서히 형성되어 오던 해군의 정체성과 전력건설 방향을 더욱 확실히 하였다.⁸⁶⁾

1995년 대양해군 건설 준비가 공식화되면서 해군이 추구하는 대양해군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다. 정호섭 박사는 당시 논의되던 대양해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국해군이 추구하는 대양해군이란 “지역해를 벗어난 대양에서도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춘 해군으로서 지역 국가 간의 해군력 균형에 영향을 주고 자주독립국가로서 (일정의) 억제력을 보유하며,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자원 개발 보호, 다자간 안보협력활동 참여, PKO 작전 지원 등의 능력을 구비한 수준”을 말한다.⁸⁷⁾ 이 정의를 보면, 해군이 당시 건설하고자 한 ‘대양해군’은 어떤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보호하는 ‘보통 국가의 해군’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83) 국회사무처, 1993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군본부), p. 2. 국회사무처, 199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군본부), pp. 2-3.

84) 국회사무처, 1997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부록(피감사기관 해군본부), p. 27.

85) 김성걸, 「해군 ‘대양해군론’ 공식 제기」, 『한겨레』 1995년 3월 7일자.

86) 국회사무처, 1995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군본부), pp. 1-2.

87) 정호섭, 앞의 논문, 『해양연구논총』 제17호, 1996. p. 312.

알 수 있다. 또, 흥미로운 점은 다국적 안보협력활동 참여와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한국 해군의 주요 능력의 일부로 여겼다는 것이다. 전 해양수산부장관이자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유삼남 장관에 의하면, 당시 예비역 해군 제독들 사이에서 한국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었고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국제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또한, 미 해군 함정들과 잦은 연합훈련을 하면서, 선진 해군들과 연합훈련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해군을 가져야겠다는 신념이 굳어져 갔다. 이러한 예비역 제독들의 생각이 해군에 전달되었고, 대양해군전력건설 개념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⁸⁸⁾ 이러한 과정에서도 당시 해군 장교들이 (자신들이 바라본) 국가의 정체성을 고려한 해군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대양해군을 향한 해군의 움직임이 단순히 북한관련 연안위주의 작전에서 대양작전 위주로 해군에 요구되는 임무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양해군을 위한 전력건설이 국방부나 합참, 또는 정부와 같이 위로부터 허가되고, 지시된 사항이었다면 그러한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실상은 국방부나 합참과 같은 군 최고정책기관에서 대양해군을 공식 정책이나 목표로 삼은 적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방백서에 “대양해군”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1995년 1회 뿐이었다. 게다가 해군에게 대양작전 능력을 갖춘 전투함이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정책기관에서 그러한 임무를 내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 오랫동안 연안해군으로 머물러왔던 해군의 입장에서 대양작전 능력을 갖춘 해군이 되겠다고 기치를 든 것은 예상되는 정부관료 조직 간의 마찰과 반대를 극복할 것이라는 굳은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모험이었다. 게다가 대양해군 전력건설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다. 해군이라는 조직의 에센스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더라면 이런 힘든 모험을 시작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대양해군건설이 국방부 차원에서의 공식 정책으로 확립되지는 못했지만, 해군에게 ‘대양해군’은 확실히 조직의 에센스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다. 안병태 제독의 뒤를 이어 유삼남 참모총장(1997-1999)은 아시아 재정 위기 때의 소위 IMF 시대를 겪으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KDX-II와 LPX와 같은 대형 사업들에 대한 재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국제관함식을 주최함으로써 국제적인 해군으로 발전하려는 한국 해군의 의지를 세계에 보였다. 이수용 참모총장(1999-2001)은 2001-2005년 국방중기계획에 이지스 구축함 등 전략기동전단 건설을 반영하였다. 해군은 이때 항공

88) 필자의 유삼남 장관님과의 인터뷰 (2011. 5. 31).

모함 모양을 응용하여 디자인한 해군 로고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해군 내의 단합을 돕고, 대중에게 해군의 일관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대양해군을 향한 비전과 해군의 정체성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⁸⁹⁾

다음 참모총장인 장정길 제독(2001-2003) 때에도 대양해군의 건설은 해군의 핵심과제였다. 2001년 국정감사에서 그는 “해군은 국가안보의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고, 대양에서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양해군 건설을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과 노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때 첫 KDX-II 함정인 충무공이순신함이 취역하였고, KDX-III를 위한 이지스 체계 계약업체가 록히드 마틴으로 결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문정일 참모총장(2003-2005) 때는 대양해군의 기치를 지속하였을 뿐 아니라, 3개의 기동전단 건설이라는 전력건설의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였다.⁹⁰⁾ 남해일 참모총장(2005-2006)은 2005년 국정감사에서 대양해군이 한국해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혔다.⁹¹⁾ 이 시기에도 독도함이 진수되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위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송영무 참모총장(2006-2008)의 임기에도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214급 잠수함인 정지함 등이 진수되고,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III 사업이 국방계획에 반영되는 등 “대양해군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았다.⁹²⁾ 특히, 이 시기에 소말리아 근해 해상소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여 국방부와 합참에 보고하였으며, 다음 참모총장인 정욱근 제독 임기에 결실을 맺어 그때부터 KDX-II급 구축함 1척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양해군’은 안병태 총장이후 공식 ‘정책’은 아니었지만, 거의 모든 지휘관들이 핵심적인 한국해군의 임무와 능력이라고 생각해 왔던 만큼 조직의 에센스로서 한국해군의 정체성과 비전이 되어 왔다.⁹³⁾

“대양해군”은 한국해군에게 조직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국가와 관련된 해군의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갔다. 해군이 90년대 초 대

89) 노주석, 「해군 심벌/로고 나왔다」, 『서울신문』 2000년 12월 8일자.

90) 필자의 송영무 제독과의 인터뷰 (2011. 5. 23).

91) 국회사무처, 2005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군본부). pp. 10-11.

92) 국회사무처, 2007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해군본부). p. 2.

93) 헬퍼린(Halperin)이 정의하는 조직의 에센스(essence)의 의미가 “(그 조직이) 어떤 임무를 해야 하고,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직 내 지배적인 집단의 시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양해군’ 임무와 능력은 충분히 역대 지휘관들이 생각하는 해군의 에센스라 말할 수 있다. Morton H. Halperin, *Bureaucra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With the Assistance of Priscilla Clapp and Arnold Kanter. p. 28.

양해군의 가치를 올림으로써 낳은 결과 중의 하나는 해군이 당시 건조하기 시작한 중-대형 또는 신형 함정들에게 ‘의미(meanings)’를 부여한 것이었다. 맥닐리(McNeely) 교수가 주장하듯, 현대 민족국가(nation-state)는 국민들로부터 공동 정체성과 문화적인 소속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유일하게 인정된 정당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⁹⁴⁾ 그러한 국가와 해군의 이미지가 연계되면, 해군의 발전은 국가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특히, 군사외교와 다국적 협력을 포함한 해군의 국제적 역할은 세계와의 관계를 확대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을 강조했던 한국의 국가차원의 노력과 매우 잘 맞았다.

국민들에게 해군이 국가의 위상이나 비전 등 국가와 관련된 의미로 다가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수준의 분석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역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대통령 연설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 대통령 연설에서 묘사되는 해군의 이미지는 거의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 뿐 이었다. 이와 달리, 1990년대 이후(1991 -2007) 대통령 연설들을 보면, 외교 정책이나 국가번영, 국익과 주권 등 해군과 국가를 연관 짓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⁵⁾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같은 시기(90년대 이후)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대통령 연설내용에서는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대양해군” 건설을 지지했고, 이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장래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5-2009년 기간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문 또는 발언 1,397개 중 20.4%가 대양해군 또는 기동전단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다.⁹⁶⁾ 여기에서 많은 의원들이 선진국 해군의 예, 국익 및 주권보호, 외교정책 지원 등을 이유로 대양해군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해군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한국이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 국제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국가라는 한국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한국을 언제까지나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라고 생각했다면, 또 세계로의 진출 가능성을

94) Connie L. McNeely, *Constructing the Nation-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Prescriptive Ac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5), p. 19.

95) 세부적인 내용분석 자료를 위해서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참조. Sangyup Lee, *Ships, Security, and Symbols: A Constructivist Explanation of South Korea's Naval Build-up*, A Doctoral Dissertation submitted to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January 2013, p. 261.

96) Ibid.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고 생각했다면, 많은 예산이 드는 대형 해군함정들을 건설하자는 주장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의 여론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양해군 슬로건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과 세계 속의 한국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비교적 깊은 인상을 주었다.⁹⁷⁾ 2011년 5월 19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1조원이 넘는 고가의 이지스함 등을 포함한 해군의 대양해군 전력계획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반군 단체나 평화주의 단체 등에서도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고 한다.⁹⁸⁾ 언론을 통해 표현된 의견에서도 대양해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조사한 12개의 일간지를 통틀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대양해군’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는 모두 366개였다.⁹⁹⁾ 이중 ‘대양해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들어간 기사는 단지 7개에 불과했다.¹⁰⁰⁾ 대양해군 전력건설이 한창이던 2005년의 첫날 주요 방송 3사중 2개의 방송국이 해군 함정과 해군부대에서 새해 첫날 뉴스로 시작했다.¹⁰¹⁾ 이는 해군 함정이 ‘희망,’ ‘비전,’ ‘각오’ 등과 같은 새해 첫날이 국민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인식되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1년 1월 20일 소말리아 근해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와 21명의 선원들을 우리 해군 구축함인 최영함이 성공적으로 구출해 냈을 때, 국민들의 반응은 흡사 월드컵이나 올림픽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승리했을 때와 유사한 벅찬 감동과 기쁨을 표현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의 감동과 흥분은 우리 해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한국사람”으로서 자신들이 속한 국가가 주권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세계에 그들이 속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사실에 대한 것이었다. 해군이 기동함대를 건설함으로써 이러한 임무를 지속할 수 있다면, 과연 누가 이러한 방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해군이 기동함대건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그 당위성 중의 하나이다.

97) 박성진, 「군 슬로건과 파이팅」, 『경향신문』 2007년 3월 2일자.

98) 조선일보

99) 12개의 일간지는 한국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내일신문, 국민일보, 그리고 아시아투데이를 포함한다.

100) 세부적인 내용분석 자료를 위해서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참조. Sangyup Lee, *Ships, Security, and Symbols: A Constructivist Explanation of South Korea's Naval Build-up*. A Doctoral Dissertation submitted to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January 2013, p. 304.

101) 모규엽, 「새해 첫날 방송 3사 메인뉴스... 하늘과 바다서 새해인사」, 『국민일보』, 2004년 12월 31일자.

V. 결 론

본 논문은 한국해군이 왜 기동함대전력 등 대양작전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그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를 위해 필자는 능력, 교리, 조직 정체성의 세 가지 관점에서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첫째, 능력적인 면으로 보면, 북한의 군사위협 등의 현존위협과 다른 위협요소들을 잠재위협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분법이다. 먼저, 북한의 위협 성격이 과거의 그것과는 달라져 비대칭적인 위협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잠재적 위협이라고 여겨졌던 해양주권 및 영토를 둘러싼 아시아에서의 분쟁은 현존위협이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은 해군을 이용한 전력투사능력과 그들이 생각하는 방어영역을 확장시켜 왔다. 더욱이, 현재와 미래의 국제안보상황에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초국가적인 위협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해군의 전력건설은 다양한 위협 상황들을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90년대부터 추진해 오던 대양해군 건설 준비 과정들은 이러한 전력건설 필요성에 부합한 방향이었다.

둘째, 한국해군이 추구해 오던 대양작전능력은 최신 해군교리발전 추세에도 부합한 방향이었다. 전쟁의 수행 목적과 방식이 적의 괴멸이 아닌 정치적 목표 달성 및 그를 위한 효과 창출임이 강조됨에 따라 적의 전쟁 수행능력과 의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주요 목표를 선별하여 공격할 수 있는 정밀타격능력이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의 역할이 부각되어 왔다. 또한, 한-미 연합군 전쟁 개념이 적의 공격 징후를 포착해 먼저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공세적으로 바뀌어 왔고, 한국이 2015년 전작권 환수 이후 한반도 군사작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그러한 능력을 가진 대양해군 전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셋째, 90년대부터 시작된 대양해군 노력은 해군이 국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인가 그 정체성을 정의해 오던 과정의 일부였다. 조직행동이론에 따르면, 이는 해군조직의 본질 또는 에센스(essence)의 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의 본질적인 특성은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갖게 되는 만큼 가까운 미래에 대양해군을 위한 전력 건설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 게다가, 대양해군은 국민들에게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러한 국가 위상이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로 인식되기도 했다. 기동

함대건설 노력은 해군이 정의해 온 국가를 위한 역할에 부합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세계 속의 한국을 위한 과제인 것이다.

천안함 폭침사태로 본 논문을 시작한 만큼 같은 맥락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 혹자는 천안함 사태에서 증명된 것과 같이, 한국은 연안에서의 북한해군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대양해군이니 기동함대니 하는 선진해군전력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안보위협을 간과한 처사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도발을 전술적인 차원에서만 대처하려는 좁은 시각일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은 여러 형태로 계속 되어 왔고, 한국 측에서는 단호한 조치가 없어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 되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는 없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을 막는 방법은 특정한 도발방식에 대한 전술적 대응이 아닌 북한 지도부의 도발 의지 자체를 꺾는 전략적 차원의 “억제” 인 것이다. 핵무기를 동원하지 않고 억제력을 발휘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북한의 지도부나 결정적인 시설물들에 대해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와 북한의 도발에 응징보복수단으로 그러한 무기체계를 사용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 자세히 논의했듯이 해군이 90년대부터 대양해군의 기치아래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 ‘기동함대’ 프로젝트로 추진해 나아갈 전력건설방향은 최신 해군교리에 따라 대지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대형 수상함이나 중잠수함 등을 포함한다. 어떠한 도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가 차원의 확실한 의지만 보여 진다면, 이러한 대양작전을 보유한 해군전력들은 북한도발에 대한 억제전력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천안함 폭침사태는 (혹자들이 주장하듯) “대양해군”을 위한 노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양해군 능력의 부족이 그러한 도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경제위기, 북한의 도발, 관료조직내의 다른 입장 등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이 있었음에도 해군의 대양작전능력 보유는 어느 정도 한국해군의 전력건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은 듯하다. 본 논문에서 설명했듯이, 주변 안보상황이 해군에게 요구하는 능력, 최신 교리발전 추세, 해군이 정의해 온 조직 정체성 등을 고려할 때, 대양작전능력을 향한 해군의 전력건설은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는 기동함대 건설을 지속함은 물론, 요구될 때 즉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미 획득한 전력건설에 내실을 기하는 노력도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들이 신장된 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전술들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능력이 현격히 다른 구형 초계함과 최신 이지스함이 같은 대잠전 전술에

투입된다면 비효율적 전력 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형함정 등 최신무기체계가 지속적으로 도입됨에 따른 운용인력 획득 및 교육훈련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운용과 실질적인 능력 면에서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보장된다면, 대양작전능력을 추구하는 한국해군 전력건설의 앞날은 더욱 밝을 것이다. 또한, 필자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여겨지는 한, 대양을 향한 한국해군의 항해는 계속 될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Abdelal, Rawi, Yoshiko M. Herrera,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se McDermott, "Identity as a Variable," In *Measuring Identity: A Guide For Social Scientists*, by Rawi Abdelal, Yoshiko M. Herrera,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se McDermot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B. H. Liddell Hart, *Strategy* (London: Faber & Faber Ltd., 1954).
- Berlatsky, Noah, *Piracy on the High Seas* (New York: Greenhaven Press, 2010). p. 9.
- Booth, Ken, "The Role of Navies in Peacetime: The Influence of Future History on Sea Power," in *Naval Power in the Pacific: Toward the Year 2000*, by Hugh Smith and Anthony Bergin, (Boulder and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1993).
- Bruce, Anthony and William Cogar. *An Encyclopedia of Naval History* (Chicago and London: Fitzroy Dearborn Publishers, 1998).
-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10*. (Washington, D.C., 1996).
- Deptula, Brigadier General David A. *Effects-Based Operations: Change in the Nature of Warfare* (Arlington, Virginia: Aerospace Education Foundation, 2001).
- Department of Defense, *Capstone Concept for Joint Operations Activity Concepts* (Version 1.0), 8 November 2010. p. JCC-10.
- Department of Defens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 (version 1.0.). 17 January 2012.
- Friedman, Norman, *Network-Centric Warfare: How Navies Learned to Fight Smarter Through Three World Wars*.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9).
- Gordon, Michael R. and General Bernard E. Trainor. *Cobra II: The Inside Story of the Invasion and Occupation of Iraq*. (New York: Pantheon Books, 2006).
- Graham, Euan, *Japan's Sea Lane Security, 1940-2004: A Matter of Life and Death?* (New York: Routledge, 2006).

- Grotius, Hugo. *Mare Liberum*.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1916).
- Halperin, Morton H. *Bureaucra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With the Assistance of Priscilla Clapp and Arnold Kanter.
- Joint Chiefs of Staff. *Joint Publication 3-0 Joint Operations*. (Washington, D.C., 2011).
- Kearsley, Harold. *Maritime Power and the Twenty-first Century*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 1992).
- Kim, Samuel S. *Korea's Globaliz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Koe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Fourth Edition)* (Glenview, IL: Longman, 2011).
- Lee, Sangyup. *Ships, Security, and Symbols: A Constructivist Explanation of South Korea's Naval Build-up*. A Doctoral Dissertation submitted to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January 2013.
- Levy, Jack S.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A Critique" in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
- Lewis, John Wilson and Xue Litai. *China's Strategic Power: The Politics of Force Modernization in the Nuclear Ag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 McNeely, Connie L. *Constructing the Nation-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Prescriptive Ac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5).
- Moore, John. *Jane's Fighting Ships* (London: Jane's Publishing Company, 1980).
- Nye, Joseph S. "Transnational Relations, Interdependence, and Globalization," in *Millennial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Studies*, by Michael Brecher and Frank P. Harve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 Pressman, Jeremy. *Warring Friends: Alliance Restraint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 Pu, Xiaou and Randall Schweller, "Signaling Status: China's Rising Strategy and the Politics of Great Power Emergence," in *Status in World Politics*, by T.V. Paul, Deborah Larson and William Wohlforth (출판 예정).
- Ross, Robert S. "China's Naval Nationalism Sources, Prospects, and the U.S. Respons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2*, Fall 2009.
- 2000 Report to Congress: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ptember 12, 2000.
- Sun-Tzu, *The Art of Warfare*,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y Roger T. Ames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3).

- U.S. State Department, *2002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cember 2002.
- U.S. State Department,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agreed at Paris, September 4, 2003.
-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eter J. Katzenste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2, Jun, 1994: pp. 384-396.
- 김현수, 『해양법총론』 (서울: 청목, 2010).
- 김효철. 한국의 배 (서울: 지성사, 2006).
- 노경수, 「21세기 한국의 안보와 해군의 역할」, 『제4회 함상토론회』 (계룡: 해군본부, 1995).
- 서진태, 「참여 정부의 국방개혁 선결과제」, 정인문, 김기정, 이성훈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 개혁』 (서울: 오름, 2004).
-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제5권) (서울: 기아경제연구소, 1996).
-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황금알, 2004). p. 54.
- 이춘근, 「한국 해군력 증강의 논리」, 『Strategy 21』 제(1)호 (1998). pp. 59-84.
- 정호섭, 「한국해군과 대양해군을 둘러싼 제 논쟁의 분석과 새로운 해석」, 『해양연구논총』 제17호, 1996.
- _____ 「한국의 해양안보: 그 몇가지 근원적 난제」, 『Strategy 21』 제(1)호 (1998).

Abstract

**Why Should the ROK Navy Maintain the Course
toward the Construction of a Mobile Task Fleet?
: From the perspectives of Capability, Doctrine, and the
Organizational Identity**

Lee Sang-Yup*

This paper asks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y should continue to focus on building ocean-going naval ships when it faces the threats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in littoral areas. My position is that the ROK Navy should keep pursuing ocean-going capabilities. I provide explanations why it should do so from the perspectives of three important dimensions: capability, doctrine, and organizational identity.

First, I argu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a littoral navy and an ocean-going navy is an unnecessary dichotomy. It may lead to inefficiency in national security. The military posture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it can address all external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rom North Korea or not. Such capability is the one that the ROK Navy has tried to acquire with the 'Blue Water Navy' initiative since the 1990s. Second,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lately developed military doctrines that emphasize jointness and precision strike capability, ocean-going capabilities such as the mobile task fleet program have become a must, not an option, given today's security situation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Lastly, I draw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Blue Water Navy (BWN)' initiative meant more than just capability to the ROK navy. The BWN represents the ROK navy's organizational identity that the navy

* Lieutenant Commander, the Republic of Korea Navy, Executive Officer, ROKS Jung Woon Mast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lumbia University, Ph. D. in Political Science, Rutgers University

has defined since the 1980s as it emphasized promoting national interest and international standing as part of its organizational essence. Furthermore, the phrase 'blue water navy' took on symbolic meanings to the people that are associated with South Korean-ness including sovereignty, national pride, standing in the world and hopes for the future.

Since 1990s, many scholars and experts have made the case for the necessity of improving South Korea's naval capability based on different rationales. They emphasized the protection of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s), the economic value of the sea, the potential danger associated with territorial disputes over islands, and increasing naval power of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paper adds to this debate by trying to explain the matter with different factors including naval doctrines and organizational identity. Particularly, this paper constitutes a unique endeavor in that it incorporating constructivist elements (that is, identity politics) in explaining a national security matter.